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숙종 | 성균관대학교

유희정** | 성균관대학교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의 개념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의 공통된 영향요인을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로 범주화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와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 및 정부신뢰에 공통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대통령 신뢰는 국가의 경제상황과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 신뢰를 부분매개하여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성, 투명성, 반응성과 같은 규범적 성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부신뢰, 대통령 신뢰,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042)

**교신저자

I. 서론

오늘날 정부신뢰의 하락 현상은 전반적인 추세라 할 만큼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IMF 경제 위기 이후 신공공관리에 기반을 둔 행정개혁을 시도하면서 시장중심의 원리와 능률지상주의를 선호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더욱이 국민들의 관심이 물질적, 편익을 넘어 인권, 환경, 평화, 여성 등의 사회문제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옮겨가면서 정부권위에 대한 거부와 함께 정부신뢰가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정부신뢰는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부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성과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민주주의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정부신뢰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셈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정부신뢰는 정부로 하여금 정책수행의 추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책순응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정부신뢰는 복잡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을 기대하게 만들어,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부신뢰 수준을 높이는 대안들을 탐색하기 위해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대부분 신뢰자 개인의 특성과 정부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뢰자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에는 사회심리학적·사회문화적 차원의 신뢰, 정치효능감, 사회참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특성에는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정책 산출물에 대한 만족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 변수들이 포함된다. 정부 특성 요인들과 관련해서 밀러(Miller 1974)는 정부의 정책이 시민 개인의 선호와 일치하기를 원하는 규범적 기대에 따른 만족도를 중시했다면, 시트린(Citrin 1974)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정부신뢰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로 시트린과 그린(Citrin and Green 1986)은 실증연구를 통해 정부신뢰 수준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정부정책의 목표가 국민의 선호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책변수, 이를 달성하는 성과변수, 대통령 국정수행 능

력과 개인적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암시하는 인물(persona) 변수로 구분되고, 이들 가운데 인물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른바 밀리와 시트린 논쟁은 대통령중심제 권력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정부신뢰 연구가 보다 복잡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대통령 개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까지 수반하여 정부신뢰와의 뚜렷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영향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정부신뢰 설명변수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즉, 두 변수 간의 공통된 속성을 전제로 영향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본 연구는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의 공통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천적 또는 관리적 대안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과 연관 지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의 공통된 영향요인들 가운데,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II절에서 정부신뢰와 대통령 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통적으로 추출된 영향요인들을 바탕으로 III절에서 분석모형을 설계한다.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실시한 ‘네트워크 세대 이해를 위한 여론 조사’를 활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IV절에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관리적·정책적 함의는 V절 결론에서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부신뢰의 개념 및 영향요인

신뢰는 공공문제의 해결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거버넌스’의 핵심 키워드로서, 다양한

행위주체들로 하여금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만들고 상호협력을 촉진시킨다(Ansell and Gash 2008).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데 정통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신뢰는 제도신뢰로서, 개인수준에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대인신뢰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반화된 사회신뢰와는 다르게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특징이 있다(Pharr and Putnam 2000).

다수의 연구자들은 정부신뢰가 ‘국민 혹은 시민들이 가지는 정치적 태도의 일종’이라는 데 동의한다(손호중·채원호 2005). 그러나 구체적인 신뢰대상은 정치체제에 대한 ‘포괄적지지’(diffuse support)와 현 정부의 산출물 및 현직자들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지지’(specific support)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개념적 정의와 측정지표 구성이 달라진다(Easton 1965). 먼저 ‘포괄적 지지’는 통치체제에 대한 정향과 정부기능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뜻하고, 정부기관과 행정 관료의 역량, 반응성 등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둔다(박종민·배정현 2011; Miller 1974). 반면, ‘구체적 지지’는 현 정부의 산출물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수반한다(Citrin 1974). 이 관점은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만족 그리고 현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신뢰에서 ‘정부’라는 개념은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적 대상(political objects) 또는 현 정부의 구성요소들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현 정권의 지도자와 관료들이 설계한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수준을 측정할 때 신뢰자의 태도를 ‘포괄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Hetherington 1998). 이에 대해 미슐러와 로즈(Mishler and Rose 1997)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단순 측정하는 것이 응답자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개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정부 기관을 행정부로만 제한 할 것인지 또는 사법부, 입법부까지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응답자들이 정부를 행정부로 이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박순애 2006).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정부신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던 요인들은 시민과 정부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차원으로 다시 나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은 사회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성과 차원으로 범주화되는데(Newton and

Norris 2000), 신뢰자의 심리적·환경적 속성의 변수들은 사회심리학적·사회문화적 차원에 정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제도적 성과차원에 포함된다.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정부신뢰는 사회, 정치적 상황보다 신뢰자 개인의 성격(personality trait)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차원에는 개인의 대인신뢰와 정치효능감의 변수들이 포함된다. 먼저 대인신뢰는 인성과 같은 감정적 정향으로 유년기 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정치적 경험과 별개로 신뢰자의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정치체제 또는 지도자들의 성과와 상관없이 신뢰자 개인의 신뢰성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정치인 또는 사회적·정치적 관심사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행동 수행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자신이 정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참여할만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뜻하는 반면, 후자는 정치체제 또는 공직자가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Abramson 1983). 두 효능감은 서로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독립적인 실체가 아닌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자발적 결사체 또는 지역사회 참여가 사회신뢰와 협력 그리고 정부성과를 매개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결사체 참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에 따라 신뢰 반경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상호이익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도록 만든다(Fukuyama 1995). 문화론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시민덕목(civic virtue)을 배양하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정치체제에 대한 감시 능력을 학습하는 기회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Newton 2001). 요약컨대, 시민들의 결사체 참여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즉 사회신뢰 수준을 높이고 개인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정부의 반응성과 책임성 향상을 불려와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성과 차원에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가 정부신뢰의 핵심 영향요인이 된다. 즉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은 신뢰자 개인의 심리 또는 민주주의 문화와 사회자본과 같은 사회적 조건의 산출물보다, 국민들이 현실에서 직접 접하게 되는 정부제도의 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들이 정부의 제도적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제도와 물질적 동기부여가 상호 호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왕식

2011). 다시 말해 국민들의 정부신뢰 수준은 국가 제도적 기관의 성과 또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와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성과가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선호, 정책과정에서의 공공가치 추구, 경제적·비경제적 정책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책선호와 정책과정에서의 공공가치 추구가 정부의 정책목표(policy goals)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련이 있다면, 정책결과에는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산출물의 질이 포함된다(Hetherington 199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선출된 정치인들은 좋은 정책형성, 건전한 경제성장, 사회통합 실현 등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부신뢰는 현 정부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와 연관되고, 그 수준은 ‘정부가 하는 일’이 유권자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Keele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시트린(Citrin 1974)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암시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증연구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능력, 인격 등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Citrin and Green 1986).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대통령 신뢰, 리더십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조기숙·남지현 2007; 배귀희·임승후 2009; 김병규·이곤수 2013; 이상신 2010; 전대성 외 2013).

2. 대통령 신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혁을 계속적으로 시도한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은 국정지지율을 통해 평가되며, 그 결과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이숙중 2012).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먼저, 대내외적 변화가 민감한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정비전과 목표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되지 않은 국정추진은 정책실패에 따른 국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이숙중·이곤수 2012).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는 국가 비전의 가치를 공유

하려는 목적 아래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집합적 의사를 정책내용에 반영하려고 한다. 즉 정부는 정보공개에 따른 투명성과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 경제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같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민여론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독립과 함께 행정우위의 국가형태를 취함으로써, 최고 국정지도자에 의한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직접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공동으로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와의 관계는 수평적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야당은 국정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 여론을 통해 견제력을 행사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정책제안에 의회가 순응하고 협조하도록 만드는 데 국정지지율을 지렛대로 활용한다(정한울·정원철 2012).

그동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요소들은 리더십 관점에서 개인적 자질과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업무수행 역량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 신뢰를 광의의 관점에서 대통령에 대해 취하는 긍정적 기대 또는 태도로 정의하고, 그 설명요인을 국정수행 평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과와 정치적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성과차원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정책추진 관련 요인들로 구성된다면, 정치적 차원은 대통령의 직접 통제가 어려운 상황적 요인들을 포함한다.

먼저, 대통령의 성과는 정책 산출과정 및 결과로 구분되고, 산출결과는 다시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 산출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성과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수용성과 아젠다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젠다를 기획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간의 제약과 자원 부족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이내영 2012). 그런데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 유형이 과거의 정부우위 관계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결정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거래비용보다 시민의 저항이 가져오는 순응비용이 몇 배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윤성이 2012).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수행에 성공하려면 집합적 의사결정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함께 순응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산

출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응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대중의 정책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행정자치부 2006). 이러한 규범적 성과는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능력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 산출결과 측면에서 대통령의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된다. 경제적 성과는 평가 대상의 단위와 시점에 따라, 개인의 재정상황과 국가경제 상황 그리고 회고적 평가와 전망적 평가로 다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보다는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는 반면, 경제실적에 대한 회고적 판단과 전망적 판단의 영향력 크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비경제적 성과는 경제를 제외한 모든 정책영역으로,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을 가늠할 수 있는 외교와 안보, 사회, 교육 등의 국내 정책의 성과가 해당된다. 이 중에서 외교정책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에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편이다(Nickelsburg and Norpoth 2000).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는 대표적으로 정당일체감, 허니문 효과와 결집효과, 정치적 스캔들이 있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달리 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McAvoy and Enns 2010). 허니문 효과는 대통령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반면, 결집효과는 외교·안보적 국가위기 발생 시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Muller 1970). 이 두 효과는 단기적이고 특수 시점의 정치상황을 고려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정한울·정원철 2012). 끝으로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참모, 친인척 등의 정치적 스캔들 역시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신뢰와 대통령 신뢰는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나타내는 정치신뢰의 요소와 정부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평가적 정향을 암시하는 제도신뢰로서의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에도 공통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 신뢰는 국정수행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종합컨대, 사회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성과차원의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대통령 신뢰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헤더링턴(Hetherington 199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부신뢰의 외생변수임과 동시에 내생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와 대통령 신뢰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짓기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권위주의적 문화를 바탕으로 행정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기대가 대통령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 대통령 개인의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부에 대해 취하는 긍정적 기대와 태도보다 선행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 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정치적 태도와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 신뢰를 매개로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모형 및 변수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가 대통령 신뢰를 매개로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독립변수가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증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차례로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뜻하며, 매개변수인 대통령 신뢰와 함께 “귀하께서는 다음 기관이나 집단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의 단일문항을 통해 10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0점: 매우 불신~10점: 매우 신뢰).¹⁾ 독립변수들은 신뢰자의 사회정치적 태도, 정부의 사회경제적 성과 및 규범적 성과 차원

1)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신뢰를 국가 제도적 기관 중 하나인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고, 응답자들의 태도를 ‘구체적 지지’와 ‘포괄적 지지’로 구분하지는 않았다(조기숙·남지현 2007; 전대성 외 2013; Citrin 1974; Mishler and Rose 1997).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신뢰와 대통령 신뢰를 구별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김병규·이근수 2013), 대통령 신뢰가 정치행위자에 대한 신뢰로서의 속성을 갖는다는 데 차이를 두었다(Norris 1999). 다시 말해 정부신뢰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회제도에 의한 영향을 통해 형성되는 반면(박병진 2004), 대통령 신뢰는 현행 5년 단임제 아래서의 국정수행 평가에 기초하므로 형성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변성이 큰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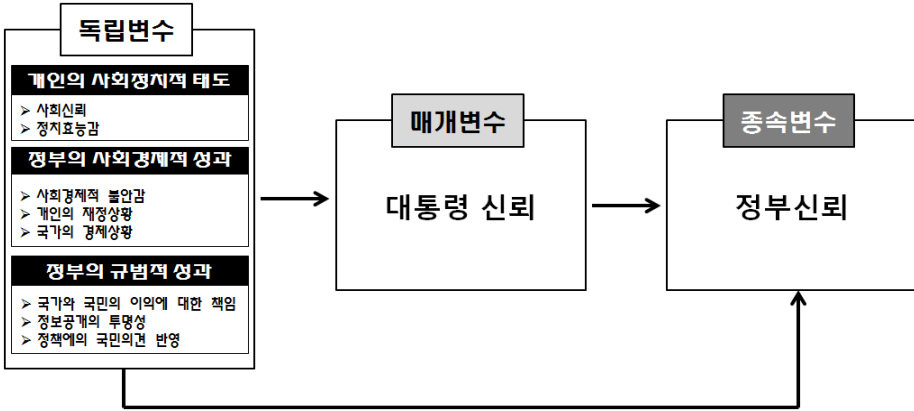
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회정치적 태도에는 사회신뢰와 정치효능감의 변수들이 포함된다.²⁾ 사회신뢰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계층 상승의 기회, 법과 절차의 공정성, 연고보다는 실력이 평가받는 사회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정치효능감은 정부나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반응하는가에 대한 태도인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과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관적 지각인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 두 가지를 모두 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와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가 각각의 질문으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사회경제적 성과 차원에는 질병 또는 건강, 주거, 자녀교육 및 양육 문제, 소득 또는 자산의 감소, 고용불안, 노후 문제에 대한 걱정 즉 사회경제적 불안감과 5년 전 개인의 재정 및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비교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범적 성과 차원에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정보공개 투명성,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의 변수들로 구성된다.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제외한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모든 변수들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독립변수 중에서 개인의 재정상황과 국가의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5점 척도(1점: 매우 좋아졌다~5점: 매우 나빠졌다)가 활용되었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독립변수의 척도 구성은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와 서로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는 분석결과와 해석과 이해가 쉽도록, 정치효능감과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대통령 신뢰 및 정부신뢰의 응답 방향과 일치하도록 역코딩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복수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신뢰, 정치효능감, 사회경제적 불안감의 변수들은 평균점수를 요인 값으로 활용하였다.³⁾

본 연구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인구

-
- 2) 본 연구에서 사회신뢰는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된 일반화된 신뢰를 뜻하며, 미시적 수준에서 타인·조직·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학습된 인지적 사회자본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고려한다.
 - 3) 본 연구는 사회신뢰의 구성개념에 대한 복수의 측정지표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분석한 결과 .632로 수요 기준인 .6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림 1〉 분석모형

통계학적 요소인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정치이념, 2007년 대선투표 참여를 외재변수로 통제하였다.⁴⁾

이상을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동아시아 연구원이 2011년 12월에 실시한 ‘네트워크 세대 이해를 위한 여론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⁵⁾ 따라서 응답자들은 당시 집권 4년차에서 마지막 5년차로 넘어가는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응답률은 100%로 설문 응답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과 연령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65.0%이다. 가구소득은 500만

4) 통제변수의 척도구성은 성별과 2007년 대선 투표 참여는 명목척도, 연령은 비율척도, 이외의 변수들은 태도의 방향과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지를 주고 수치를 부여하는 서열척도가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 정치이념은 10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성향이 0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성향이 짙은 것을 나타낸다.

5) 동아시아 연구원은 ‘네트워크 세대 이해를 위한 여론조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활용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86명으로, 표본은 2011년 6월 30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추출되었다. 표본의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이다.

〈표 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항목	분류	빈도(%)	항목	분류	빈도(%)	
성별	남자	555(51.1)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176(16.2)	
	여자	531(48.9)		201~300만 원	221(20.3)	
연령	19~29세	255(23.5)		301~400만 원	225(20.7)	
	30~39세	282(26.0)		401~500만 원	184(16.9)	
	40~49세	299(27.5)		501만 원 이상	280(25.8)	
	50~59세	250(23.0)		2007년 대선투표	이명박 후보 외 투표	433(39.9)
학력	고졸 이하	380(34.9)			이명박 후보 투표	364(33.5)
	대졸 이상	706(65.0)			투표권 없음	29(2.7)
정치이념	진보	399(36.7)			기권	157(14.5)
	중도	439(40.4)		모름	103(9.5)	
	보수	248(22.8)	총합	1,086(100.0)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이념은 '보수'가 22.8%로 '진보' 또는 '중도'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대선투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은 33.5%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SPSS 프로그램의 Cronbach's Coefficient Alpha, 기술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과 Sobel 테스트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에는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가 제안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둘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 유의미하게 줄어들어야 한다. 즉,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직접적인 효과(B값)가 매개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의 효과(B값)보다 커야 한다. 이밖에 본 연구는 매개효과의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Sobel 테스트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분석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포함되는 설문문항은 총 19문항으로, 변수들의 기술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0점 척도로 측정된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를 살펴 보면, 두 문항 모두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수준보다 다소 높았다.

사회신뢰를 측정하는 문항들 간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고,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측정하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질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반면(M=2.16), “우리나라는 학연이나 지연과 같은 연고보다 실력이 평가받는 사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M=1.84).

정치효능감의 경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M=3.31),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체로 수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1.67). 스스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적 효능감은 높은 반면, 정부나 정치체제가 유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외적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5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의 재정(M=2.18) 및 국가의 경제상황(M=2.16)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경제와 직결되는 노후 및 생계(M=3.36), 소득 및 자산(M=3.32), 자녀교육 및 양육(M=3.16), 고용불안의 문제(M=3.13)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4년간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잘 못한 분야를 ‘경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2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규범적 성과 차원에 포함되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M=1.98), 정보공개 투명성(M=1.97),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M=1.83)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

로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정부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부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면, 정부의 규범적 성과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따른 불안을 완충시켜야 할 정부의 책임 및 윤리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업무처리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역시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차원의 독립변수들과 정부신뢰와의 상관계수는 $-.246 \sim .580$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들과 대통령 신뢰와의 상관계수 역시 $-.241 \sim .55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p < 0.05$). 한편 대통령 신뢰는 정부신뢰와 유의수준 0.01에서 .846의 매우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독립변수 항에 포함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7 미만으로, 회귀분석 실행 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정부신뢰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매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하는 방식에 따른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Sobel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인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모형의 F값은 유의수준 0.001에서 70.475이고, 수정된 R^2 값은 .480으로 약 5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기준 값인 2.0에 근접해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공차한계량은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차원의 일부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5년 전과 비교한 개인의 재정 및 국가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대통령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893$, $B=.141$; $t=7.633$, $B=.559$). 경제성과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재정적 상태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대통령 신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통령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자기중심적 판단보다는 이타적 혹은 사회 전반적 판단에

〈표 2〉 대통령 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독립변수		대통령 신뢰		
		β	t	공차한계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	사회신뢰	.167	1.269	.773
	정치효능감	.076	.700	.941
정부의 사회경제적 성과	사회경제적 불안감	-.169	-1.522	.821
	개인의 재정상황	.141	1.893*	.615
	국가의 경제상황	.559	7.633***	.596
정부의 규범적 성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	.786	7.718***	.568
	정보공개에 투명성	.181	2.023**	.628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	.747	6.354***	.508
통제변수 ^{b)}	성별	-.118	-.949	.943
	연령	.027	4.239***	.836
	학력	-.066	-.671	.925
	수입	-.074	-1.029	.843
	정치이념	.605	7.153***	.877
	2007년 대선투표	-.001	-.406	.968
R ² (수정 R ²)		.487(.480)		
F		70.475***		
Durbin-Watson		1.997		

a) 계수는 비표준화임.

b) 성별: 1=남자, 0= 여자

c) 학력: 1=대졸이상, 0=고졸 이하

d) 2007년 대선투표: 1= 이명박 투표, 0= 이명박 외 투표 또는 기타

*p < .1, **p < .05, ***p < .01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규범적 성과 차원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t=7.718, B=.786), 정보공개에 투명성(t=2.023, B=.181),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t=6.354, B=.747) 등 모든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규범적 변수들은 거버넌스 연구에서 중시하는 정부의 책임성, 투명성, 반응성을 각각 대표하는 지표들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대통령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바론과 케니(1986)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변수는 개인의 재정 및 국가의 경제상황 그리고 정부의 규범적 성과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 2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대통령 신뢰 변수의 추가 투입에 따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 분석에서 회귀모형의 F값은 65.200($p < .001$)으로 설명력은 약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과 공차한계량 역시 모두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정부신뢰에 대한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의 변수들의 영향부터 살펴보면, 사회신뢰 및 정치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32$, $B=.271$; $t=2.342$, $B=.225$).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차원의 변수들 역시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적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개인의 재정 및 국가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66$, $B=-.202$; $t=1.837$, $B=.121$; $t=4.774$, $B=.309$). 한편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t=9.440$, $B=.847$)과 정보공개 투명성($t=2.462$, $B=.194$), 그리고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t=5.936$, $B=.615$)의 규범적 성과 변수들 또한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 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와 <표 3>의 1단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정부신뢰와 대통령 신뢰에 공통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결과는 대통령 신뢰가 개인적 자질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신뢰와 마찬가지로 정부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 평가를 암시하는 제도적 차원의 신뢰로서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2단계 분석에서는 매개변수인 대통령 신뢰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1단계에서의 회귀모형보다 F값(199.103, $p < 0.001$)과 설명력(73.9%)이 모두 증가하였다. Durbin-Watson과 공차한계량 역시 기준 값을 충족시키고 있어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단계 분석에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표 3〉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 분석

변수명	1단계 분석			2단계 분석		
	β	t	공차한계	β	t	공차한계
사회신뢰	.271	2.332**	.773	.161	1.982**	.772
정치효능감	.225	2.342**	.942	.179	2.675***	.941
사회경제적 불안감	-.202	-2.066**	.821	-.098	-1.431	.819
개인의 재정 상황	.121	1.837*	.615	.031	.671	.611
국가의 경제 상황	.309	4.774***	.596	-.047	-1.022	.563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	.847	9.440***	.570	.351	5.449***	.537
정보공개에 투명성	.194	2.462**	.629	.073	1.318	.626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	.615	5.936***	.508	.145	1.970**	.488
대통령 신뢰				.635	33.271***	.513
성별	.297	2.698***	.942	.366	4.772***	.941
연령	.015	2.730***	.837	-.002	-.395	.822
학력	-.031	-.363	.924	.012	.198	.924
수입	-.065	-1.030	.844	-.020	-.458	.843
정치이념	.392	5.257***	.876	.008	.158	.836
2007년 대선투표	-.001	-.547	.970	-.001	-.512	.968
R ² (수정 R ²)	.468(.460)			.742(.739)		
F	65.200***			199.103***		
Durbin-Watson	1.954			1.935		

- a) 계수는 비표준화임.
 - b) 성별: 1=남자, 0= 여자
 - c) 학력: 1=대졸 이상, 0=고졸 이하
 - d) 2007년 대선투표: 1= 이명박 투표, 0= 이명박 외 투표 또는 기타
- *p < .1,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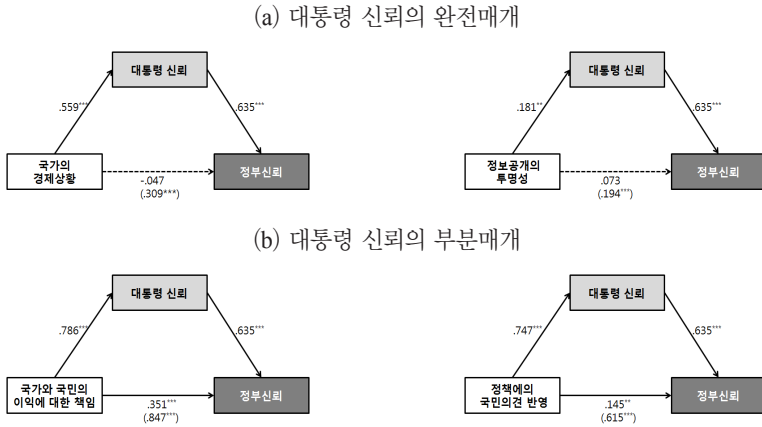
된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이 2단계 분석에서는 감소하였고, 대통령 신뢰(t=33.271, B=.635)는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바론과 케니(1986)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제시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표 3〉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태도 차원의 변수들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 분석에서도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앞 〈표 2〉에서와 같이 개인의 사회신뢰와 정치효능감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안감은 대통

령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매개 효과 분석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한편 <표 3>의 2단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t=5.449$, $B=.351$),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t=1.970$, $B=.145$)의 규범적 성과 변수들만이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 1단계 분석에서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개인의 재정 상황과 국가의 경제 상황 그리고 정보공개 투명성은 대통령 신뢰를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변수들은 대통령 신뢰를 매개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개인의 재정상황 및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정보공개의 투명성 변수들이 <표 3>의 2단계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관료기구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대통령 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규범적 성과 차원 중에서 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신뢰의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바론과 케니(1986)의 첫 번째 제안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고자 Sobel 테스트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재정상황($z=1.88$)을 제외하고 국가의 경제상황($z=7.46$, $p < .000$),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z=7.51$, $p < .000$), 정보공개의 투명성($z=2.03$, $p < .05$),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z=6.22$, $p < .000$)의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를 매개로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 신뢰의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a>를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대통령 신뢰를 통제하였을 때 정부신뢰에 대한 국가의 경제상황, 정보공개의 투명성의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이므로, 대통령 신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b>는 대통령 신뢰의 부분매개효과가 발견된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국가와



〈그림 2〉 정부신뢰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과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은 대통령 신뢰 변수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 신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이론 및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모형은 상당한 수준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변수인 대통령 신뢰와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를 설명하는 총 3개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매개변수 투입에 따른 일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크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나타난 정부신뢰 영향요인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자 개인의 사회신뢰, 정치효능감, 사회경제적 불안감은 정부신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 대한 시민 개인의 태도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부신뢰와 대통령 신뢰 모두 정부정책의 성과가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공적신뢰이지만, 대통령 신뢰는 정치행위자에 대한 지지의 속성을 내포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Norris

1999). 즉 대통령 신뢰 수준은 국정운영 지지율과 같이 가변성이 크고 대통령 임기 동안에 증점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국민 개인의 특성과 인식보다 대통령의 역량을 보여주는 정치경제적 성과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정부성과 차원의 변수들은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에 공통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긍정적 기대 또는 믿음이 정부기능 및 규범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성평가 신뢰자 개인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적 정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차원의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보다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개인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규범적 성과 차원의 모든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그 상대적 영향력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책임, 정책에 의 국민의견 반영, 정보공개 투명성 순으로 공통되게 나타났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는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참여 제도 시행과 같은 법적·제도적 환경의 통제를 받는다. 반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공공선’의 가치 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내외부의 통제와 감시보다 관료의 자유재량에 의존한다(Romzeck and Dubnick 1987).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국민들의 정부신뢰 수준은 제도적 또는 법률적 통제 수준이 높은 차원의 성과보다 도덕 및 윤리적 가치 추구의 규범적 성과에 보다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표 3>의 2단계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대통령 신뢰 변수를 독립 변수로 추가하였을 때, 정부성과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감소하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증가하였다. 즉 정부의 개별 역량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를 설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현 정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임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독립변수들 중에서 국가의 경제상황과 정보공개 투명성은 대통령 신뢰를 완전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 과 행정정보공개가 정부신뢰 향상의 효과로 이어질 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주관적 경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통령의 어젠다 설정에 의한 통제 및 조정이 가능하다(한귀영·조성대 2010). 이러한 속성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대통령의 정책추진 방향에 따른 국민들의 주관적 경제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대통령 개인에게 경제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동원형 의제설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통령 신뢰가 정보공개 투명성과 정부신뢰를 완전 매개하는 것은 정부신뢰가 ‘주인-대리인’ 간의 신탁적 신뢰(fiduciary trust)의 속성을 갖는 것을 암시한다. ‘국민-대통령-관료’의 관계에서 대통령은 대리인과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관료들은 대리인으로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주인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곤란한 위치에 있다(유민봉 2005).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는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역 선택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관료들로 하여금 공정성과 선행의 윤리적 규범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Thomas 1998), 이러한 역할은 국민들과 달리 관료들의 신탁적 의무이행을 보다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기관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대통령 신뢰의 부분매개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사회전체의 이익이 정부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되고,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충되는 이익을 상호 조정하는 것이다(유민봉 2005).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지시사항’을 통해 국민다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정책방향 및 결정에 대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사회전체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정부가 여러 사회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두루 관계되는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고, 책임소재는 정부기관과 대통령의 역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국가 제도적 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대통령 신뢰가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과 정부신뢰를 부분매개 하는 것은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시민참여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공청회, 설명회, 인터넷 토론방, 시민설문조사 등의 기제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고 한다(Creighton 1981).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 교환은 정부가 먼저 주제를 설정한 다음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OECD 2001),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통해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Irvin and Stansbury 2004). 이때 대통령 개인의 국민설득력은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민주적 리더십의 척도가 되고, 정부기관의 정책 변동 시에도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된다. 종합컨대, 정부가 국민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참여 제도의 효과성과 대통령의 소통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제도 운영 주체인 정부기관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V. 함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와 정부의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 신뢰를 매개로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와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 및 정부신뢰에 공통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와 대통령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과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의 책임성, 투명성, 반응성과 같은 규범적 성과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전체의 이익 추구, 국민의견 반영의 규범적 성과 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것으로 발견되어, 정부가 국민들의 정책만족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정책수혜자와 재원부담자들 간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대통령 신뢰는 국가의 경제상황과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이 경제영역에서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료들의 신탁적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평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대통령이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근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소통매체가 여론의 의제설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뉴미디어의 다양한 속성을 활용해 대통령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통령의 대국민 스킨십을 강화시키고, 시민-언론-정부 간의 의견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규섭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뉴미디어의 네트워크 속성을 잘 활용한 해외사례들이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 신뢰를 부분매개 하여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행정 관료들이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을 충실하게 섬긴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효과적인 참여제도를 확충하고 대통령이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소관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과 함께 병행될 때 실질적 효과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한국에서는 소통 면에서 대통령 개인의 능력이 정부 전체의 역량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과거의 국정홍보처가 없어진 상황에서 홍보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대통령

의 친서민 행보나 언론 및 대중적 접촉의 저변을 넓히고 대통령 활동의 홍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대통령 신뢰의 공통된 영향요인을 발견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변수만을 선택하여 관계성과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와 상황적 요인의 영향 정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자료조사의 근접시점에서 발생한 정치·행정 환경의 변화와 오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투고일: 2015년 4월 26일

심사일: 2015년 5월 4일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29일

참고문헌

- 김병규·이근수. 2013. “대통령 신뢰와 행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권 2호, 541-566.
- 김왕식. 2011.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성과 접근방법의 검증.” 『사회과학연구』 27권 2호, 141-161.
- 동아시아 연구원. 2011. 『네트워크 세대 이해를 위한 여론조사』.
- 박병진. 2004.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 근대적 요인과 탈근대적 요인.” 『시민사회와 NGO』 2권 2호, 87-118.
-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권 2호, 73-97.
-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 연구』 17권 2호, 117-142.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선호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권 4호, 61-92.

-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 처리장 입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권 3호, 87-113.
- 유민봉. 2005. 『한국 행정학』. 서울: 박영사.
- 윤성이. 2012.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이숙중·강원택 편.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179-201.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내영. 2012. “대통령 어젠다.” 이숙중·강원택 편.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45-67.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상신. 2010. “정부신뢰의 위기: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권 4호, 97-117.
- 이숙중. 2012.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안.” 이숙중·강원택 편.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21-44.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숙중·이근수. 2012.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이숙중·강원택 편.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21-44.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전대성·권일웅·정광호. 2013.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181-206.
- 정한울·정원철. 2012. “국정지지를 관리.” 이숙중·강원택 편.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239-282.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조기숙·남지현. 2007.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권 2호, 61-92.
- 한규섭. 2012. “대통령의 국정홍보.” 이숙중·강원택 편.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45-67.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한귀영·조성대. 2010. “대통령 국정운영지지, 필연적 하락과 주체적 대응의 동학: 노무현-이명박 임기 초반 비교 및 노무현 재임기간 분석.” 『한국정치연구』 19집 2호, 77-106.
- 행정자치부. 2006. 『정책과정별 국민참여 수준의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 Abramson, R. 1983. *Political Attitudes in America: Formation and Change*. San Francisco: Freeman.
- Ansell, C. and A. Gash. 2008. “Collaborative Government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18, No. 4, 543-571.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perienc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ron, M. an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No 6, 1173-1182.

- Citrin, J.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No. 3, 973-988.
- Citrin, J. and P. Green,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No. 4, 431-453.
- Creighton, L. 1981. *The Public Involvement Manual*. Cambridge, M.A.: Abt.
-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etherington,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No. 4, 791-808.
- Irvin, A. and J. Stansbury. 2004. "Citizen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Is it Worth the Effor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 No. 1, 55-65.
- Keele, L. 2007. "Social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s* 51, No. 2, 241-254.
- MaAvoy, E. and K. Enns. 2010. "Using Approval of the President's Handling of the Economy to Understand Who Polarizes and Why."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40, No 3, 545-558.
- Miller,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No. 3, 951-972.
- Mishler, W. and R. Rose. 1997. "Trust, Distrust, and Skepticism: Popular Evalu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Post-Communist Societies." *The Journal of Politics* 59, No. 2, 418-451.
- Muller, E. 1970. "Presidential Popularity from Truman to Johns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No. 1, 776-792.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c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 No. 2, 201-214.
- Newton, K. and P. Norris.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J. Pharr and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ickelsburg, M. and H. Norpoth. 2000. "Commander in Chief or Chief Economist: The President in the Eye of the Public." *Electoral Studies* 19, No. 3, 313-332.
- Norris, P. 1999. "Introduction: The Growth of Critical Citizen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 Pharr, J. and D. Putnam.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mzek, S. and J. Dubnick. 1987.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 No. 3, 227-238.
- Thomas, W. 1998. "Maintaining and Restor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Administration & Society* 30. No. 2, 166-193.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Trust in President

Sook Jong Lee | Sungkyunkwan University

Hi Jeong Yu | Sungkyunkwan University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rust in president as a separate variable in understand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re have not been enough empirical studies analyzing their relationships. Considering this gap, this study measures the effect of trust in president up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For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rust in president, this study has categorized common factors affecting both trust in president and trust in government into socio-political attitudes and government's socioeconomic and normative performances. Our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except for socio-political attitudes and the anxiety about socioeconomic risk, all variables of socioeconomic and normative performanc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ust in president and government. Next, trust in president completely mediates the effects of perceptions on both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government's information disclosure up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rust in president partially mediates the effects of government's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to public opinions up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sidential leadership plays a crucial role in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s. In addition, our findings imp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strategic management to enhance the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by improving its normative performance such a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Keywords: public trust in government, trust in president, government's socio-economic and normative performance